

# G-Welfare Weekly Report

## 01

### 중앙정부 정책동향

#### 1. 아동학대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 '착한신고제' 도입

##### 01 주요 내용

- 정부와 여당은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학대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착한신고제'를 강화하고, '권역별 아동폭력근절센터'와 '국가 아동 트라우마 네트워크'를 설치한다고 발표(당정협외, '15. 12.30.)
  - 주요 논의사항은 ▶아동 보호 사각지대 중심 초기 발견 강화 ▶아동학대 발생 초기 신속 대응 강화 ▶재학대 방지 및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 아동학대 신고는 112(전화)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착한신고' 모바일 앱에서 가능
- 현재 아동학대 사건 대응이 통일된 컨트롤타워 없이 범정부 유관기관 협의체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해바라기아동센터(아동성폭력상담기능)를 합쳐 권역별 아동폭력근절센터를 구성하고 법무부 등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학교 기능을 강화하고,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와 교육청 산하 We센터를 연결한 '국가 아동 트라우마 네트워크'를 구성해 학대 의심 사례를 교사가 문의하면 즉각 기관이 평가하고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아동학대 관련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된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 특례법은 2013년 울산·칠곡 계모사건을 계기로 제정
- 아동학대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여 임시조치를 통하여 친권 제한·정지, 상담위탁, 치료위탁 등으로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개입이 가능해졌고, 응급조치를 통하여 학대 피해 아동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 가능해짐.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는 실효성이 적다는 의견이 다수

- 당정은 무엇보다 아동학대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폭력 예방 → 신속 조치 → 전문 치료 및 재활 → 공정 수사과 처벌 → 재발 방지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고치기 위해 '아동폭력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백서를 만든다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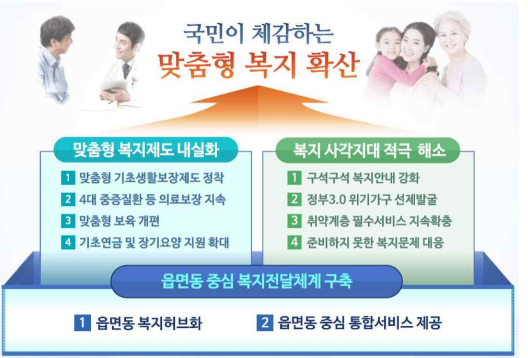
##### 02 경기도에의 시사점

- 2014년 경기도의 아동학대 건수는 3,751건으로 전체 아동학대의 1/4을 차지
-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 시설 및 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체계 구축
  - 현재 경기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총 11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나 북부에는 1개소만 설치
  - 통합체계 운영을 위한 모델 개발 및 관련 연구 수행
  - 현재 운영 중인 시설 가운데 한 기관을 광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 및 보조
- 전담 콜센터 만들고 신고자에 대해 자원봉사 인증, 공익활동에 대한 보상 등을 제공

## 2. 보건복지부, '복지 행복 체감 프로젝트' 추진 계획 보고

### 01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2016년 업무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16.1.20.)
-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읍면동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윈스톱 서비스를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한다는 계획

〈2015년 성과〉	〈2016년 정책 방향〉
<p>〈맞춤형 복지 틀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 수급자 수 확대('13년 135만명 → '15년 165만명)</li> <li>•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증가 ('13년 77.5% → '15년 83.1%(추정))</li> <li>•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확대 ('13년 407만명 → '15년 448만명)</li> </ul>	 <p>국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확산</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b>맞춤형 복지제도 내실화</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착</li> <li>2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 지속</li> <li>3 맞춤형 보육 개편</li> <li>4 기초연금 및 장기요양 지원 확대</li> </ol>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b>복지 사각지대 적극 해소</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석구석 복지안내 강화</li> <li>2 정부3.0 위기가구 선제 발굴</li> <li>3 취약계층 필수서비스 지속확충</li> <li>4 준비하지 못한 복지문제 대응</li> </ol> </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b>읍면동 중심 복지전달체계 구축</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읍면동 복지허브화</li> <li>2 읍면동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li> </ol>

- 중점과제는 첫째, 읍면동 복지허브화, 읍면동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등 기존의 시군구 체계와 함께 「**읍면동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강화
- 둘째,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 지속 강화, 전 계층 보육서비스 맞춤형 개편, 기초연금장기요양보험 등 어르신 복지 강화를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도를 안착**
- 셋째, 구석구석 복지 안내 강화, 정부3.0 위기가구 선제 발굴, 취약계층 필수서비스 지속 확충, 준비하지 못한 복지수요 대응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

### 02 세부 업무 계획

#### 1. 읍면동 중심 복지전달체계 구축

- ① 읍면동 복지허브화
  - '18년까지 모든 읍면동(3,496개소)의 복지허브화를 목표로 700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설치하고 복지경력자 읍면동장 목표제를 실시하는 등 복지인력의 전문성을 강화
- ② 읍면동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 “맞춤형복지 전담팀” 이 설치된 읍면동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 가구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민간자원 연계가 활성화

#### 2. 맞춤형 복지제도 내실화

- ①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착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 기초생활 현금급여 13.4%(평균 6.1만원) 인상,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단독가구 선정기준액 93만원 →100만원 인상)
  -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지원 강화 :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가입대상자 확대, 내일키움 통장 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추가지원

②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 지속 강화

- (4대 중증질환) 유도초음파, 고가항암제 등 200여개 비급여 신규 건강보험 적용 ('13~'15년 약 6,150억 원 경감, '16년 약 2,200억 원으로 총 8,350억 원 경감)
- (3대 비급여) 선택의사 비율 33%까지 축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400개 병원 실시
- 초경청소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및 건강상담(의사와 1:1)서비스(12세, 23만 명), 산전초음파(48만 명), 결핵(7만 명), 틀니·임플란트(70만 명) 등 생애주기별 보장 확대

③ 종일반 위주의 보육서비스를 맞춤형으로 개편

- 국공립(150개소), 공공형(150개소), 직장 어린이집(80개소) 등 확충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시행
- 보육교사 자격 및 처우개선 : 영아반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인상(월 17만원('15년) → 월 20만원('16년)), 보조교사 12,344명, 대체교사 1,036명('16년) 지원, 보육교사 겸직 어린이집 원장 수당(월 7만5천원) 지원

④ 어르신 복지 강화

- 기초연금 보장 강화 : (대상자 확대) '16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 인상, (사각지대 발굴)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 도입 및 이력관리 대상 DB(10만 명) 구축, 만 65세 도래 어르신 사전 신청 안내 등
- 장기요양보험 지원 확대 : 가족상담지원, 방문요양-간호 통합서비스 도입 등 요양서비스 다양화, 치매노인 서비스 확대(치매등급 이용시간 확대, 치매가족 휴식지원)

**3. 복지 사각지대 적극 해소**

① 구석구석 복지 안내 강화

- 생활밀착형 복지 안내 강화 : 129콜센터 복지상담 강화,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한 홍보
- 복지공무원·지역 주민, 보건복지분야 인력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 활성화

② 정부3.0 위기가구 선제 발굴

-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등 13개 민관 기관 24종 위기징후 정보 수집분석

③ 취약계층 필수서비스 지속 확충

- 취약계층 돌봄 및 안전 강화 : 범부처 아동학대 조기 신고·발견체계 구축, 취약 독거노인의 사회안전망 강화, 장애등록 신청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원스톱 연계지원
- 민간서비스 연계로 복지지원 확대

④ 준비하지 못한 복지수요 지원

- 노후준비지원센터(153개소) 지정운영,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1인 취약가구 보호 강화

**03 경기도에의 시사점**

- 보건복지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주민 「복지」 센터로서 전환하고 700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여 2018년까지 모든 읍면동을 복지허브화할 예정으로,
- 경기도는 읍면동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전달체계 전담팀' 설치하고, 중앙-경기도-경기복지재단이 연정하여 '전달체계 지원단'을 설치
  - 전담팀은 동복지기능강화와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NEXT 주민자치센터와의 협업체계를 구축
  - 지원단은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책임읍면동제와의 연계를 컨설팅하는 등 지역에 맞는 모형 설계
- 복지사각지대 적극해소를 위해 경기도차원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상자 발굴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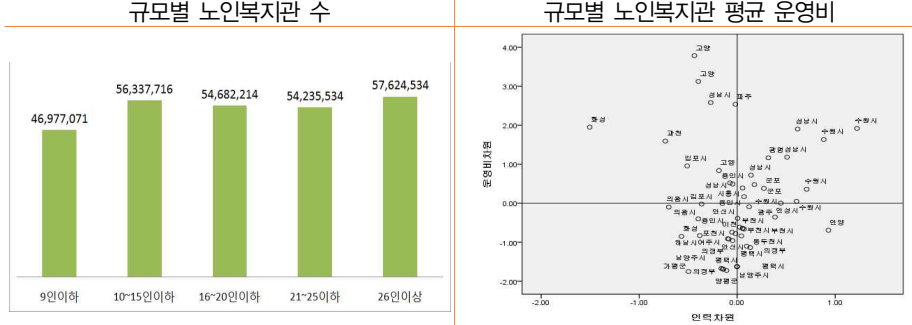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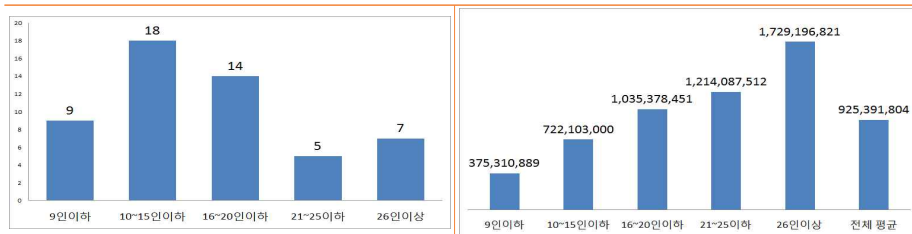
# 02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 도내 노인복지관 개소당 평균 운영비 9억2천5백 수준

지역 내 어르신들께 복지와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내 노인복지관 53개소는 각 지역별로 운영비 지원 수준이 상이하여 지역별 편차 발생

- 노인복지관은 '적정운영비(혹은 표준운영비)' 기준 없이 지역 사정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며 1개소 당 약9억2천5백만 원 수준이며 이중 도비는 면적에 따라 25백만원~35백만원 지원
  - 특히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 및 시군의 '계획공급' 과 '적정운영비 산출' 노력이 필요
  - 아래 표 중 운영비 산포도에서는 다수의 복지관이 '0점' 아래에 위치하여 실제 인력과 운영비 상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

〈도내 시군별 노인복지관의 평균운영비〉



운영비와 인력을 모두 고려한 복지관 운영비 산포 \*중심선이 교차하는 '0점' 에 가까울수록 적정

시군	평균	개소	시군	평균	개소
가평군	480,320,000	1	안양시	350,000,000	1
고양시	1,960,669,667	3	양평군	352,478,000	1
과천시	1,750,000,000	1	여주시	630,000,000	1
광명시	1,225,576,000	1	연천군	637,500,000	1
광주시	850,000,000	1	용인시	925,151,333	3
군포시	997,914,000	2	의왕시	1,031,040,500	2
김포시	1,246,262,000	2	의정부	450,000,000	3
남양주시	385,000,000	2	이천시	655,000,000	1
동두천시	612,720,000	1	파주시	1,831,000,000	1
부천시	673,351,333	3	평택시	350,000,000	4
성남시	1,349,173,116	5	포천시	680,000,000	1
수원시	932,031,810	5	하남시	766,154,000	1
시흥시	1,044,571,000	1	화성시	1,487,500,000	2
안산시	694,338,500	2	전체 평균	925,391,804	53
안성시	662,795,000	1			

- 경기도 차원에서 31개 시·군이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적정운영비 산출기준을 수립하여 제시
  -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매년 운영비 수준과 복지관 인적구성의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여 시·군에 정책적 참고자료로 제시하여 '시설 인프라 형성에 균형적 발전' 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역할 필요

# 03 FACT CH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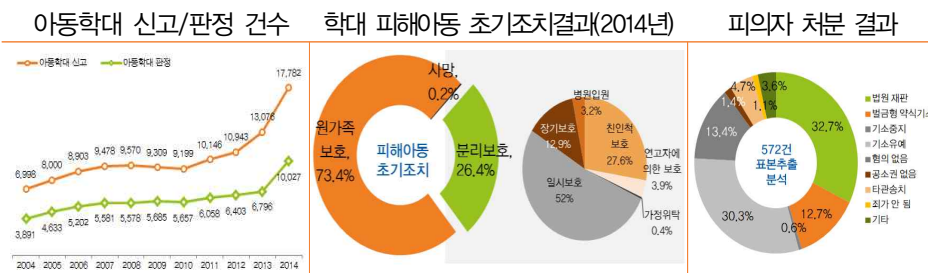
## 폐지 가격 하락으로 폐지 줍는 노인들이 사라진다?

- 폐지 가격이 최근 몇 년 간 큰 폭으로 떨어져, kg당 110원<sup>1)</sup> 정도이며, 이로 인해 170만 명에 달하는 폐지 줍는 이들의 생계도 더 팍팍해지고 있다(머니투데이, '16.1.20. 기사)
- 경기도내 폐지 줍는 노인 수<sup>2)</sup>는 5,891명이며,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층이 57%를 차지 - 폐지가격 하락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 경기도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15.4.8.)하고 복지사각지대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 중임
  - 안산시, 안성시, 김포시의 281명을 대상으로 생계비(월 2만원)와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
- 해당 사업의 평가를 통해 사업의 방향성을 검토한 경기복지재단(2015)연구<sup>3)</sup>는 폐지 줍는 노인을 '생계형'과 '소일거리 빈곤형'으로 구분하고,
  - '생계형'의 절대 빈곤층에는 생계비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소일거리 빈곤형'으로 경제적으로 절박하지 않은 경우 안전지원, 건강지원 등을 제안
-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현금지원 외에 위기 노인 및 빈곤층 사례 발굴, 안전사고 예방과 지역사회 갈등(폐지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감소 정책 추진

1) 2015년 12월, 수도권지역 기준  
 2) 경기도 내부자료 '14.10.31.기준  
 3) 복지사각지대 노인 특성 및 해소방안 연구 : 경기도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시범사업 중점으로

# 04 통계로 보는 복지

## 아동학대 건 수 10년 새 약 2.6배 증가



\*단위: 건, %  
 \* 아동학대 유형 및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등 통계는 지난 14호(8.12.)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2015)(좌)(중),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5) 보고서(우)

-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는 11만3천404건
  - 이 중 아동학대 판정 건은 6만5천511건이며, 2014년에는 1만27건으로 전년 대비 1.8배 가량 증가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초기조치결과, 전체의 73.4%인 7천362건이 다시 원가족으로 복귀
  - 분리보호 조치된 경우, 일시보호 1,377건(52%), 친인척보호 732건(27.6%), 장기보호 342건(12.9%), 연고자에 의한 보호 103건(3.9%), 병원입원 84건(3.2%), 가정위탁 11건(0.4%) 순
- 또한 아동학대 피의자로 조사받은 가해자의 절반가량이 면죄부
  - 검찰 처분 중 572건을 표본 추출한 결과, 법원 재판에 넘긴 건은 32.2%에 불과하며 벌금형 약식기소가 12.7%였고 나머지는 기소유예(30.3%), 혐의 없음(13.4%) 등으로 처리
- 최근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시신 훼손 등의 중대범죄를 고려할 때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제기

1)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